

## 2014년 중국경제 형세 및 거시조정 정책 동향

### 2014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4년 중국경제 형세 및 거시조정 정책 동향
2. 일 시 : 2014. 5. 27(수) 16:00~18:00
3. 발표자 : 국가신식중심 판젠핑(范劍平) 수석이코노미스트

### 1. 2014년, 어렵게 시작한 중국경제

#### 가. 2014년 중국경제 형세

□ 경제운영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음.

- 1/4분기 GDP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동기대비 7.4% 성장한 12조 8,213억 위안 달성하여 2013년 1/4분기의 7.7%보다 0.3% 하락하였지만 낮은 수준은 아님.
- 산업별로 볼 때, 1차 산업은 동기대비 3.5% 성장한 7,776억 위안, 2차 산업은 7.3% 성장한 5조

7,587억 위안, 3차 산업은 7.8% 성장한 6조 2,850억 위안 달성함.

□ 경제둔화 압력이 여전히 상당히 큼.

- 1/4분기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1.4%임.
- 전기대비 성장률의 1년 추산치는 5.6%에 불과하여 지난해 4/4분기의 6.8%보다 1.2%p 하락하였음.

□ 세계경제 회복은 예상치 못했던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형식으로 진행됨.

-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세계무역의 대폭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였음.
- 2014년 초부터 지금까지 BDI지수는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1-4월 중국 수출입 무역총액: 0.5% 하락한 1조 3,243.2억 달러
  - 그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 하락한 6,797.6억 달러와 1.4% 증가한 6,445.4억 달러로 무역 흑자는 41.4% 감소된 352.4억 달러를 달성함.
- 4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 0.8% 증가한 3,586.3억 달러
  - 그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0.9% 증가한 1,885.4억 달러와 0.8% 증가한 1,700.9억 달러로 무역 흑자는 1.8% 증가된 134.5억 달러를 달성함.
- 실제 무역상황은 해관통계보다 더 좋은 발전양상을 보임.
  - 1-4월 공업제품 수출납품액(出口交貨值)은 동기대비 5% 증가하였고 그중 4월에 6.2% 증가하였음.

□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

- 올해 들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은 이미 3% 정도 절하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대폭 절하는 없고 소폭적인 변동만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의 과도 절하 역시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을 가증시킬 수 있음.
  - 위안화 절상은 해외 핫머니의 유입에 따른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율 인상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반대로 위안화가 과도 절하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고 자금의 해외유출에 따른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소비시장

- 1-4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동기대비 12.0% 증가한 8조 1,782억 위안에 달함.
  - 그 중 일정액 이상(限額以上, 연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소매기업) 기업의 온라인 소매액은 52.0% 증가한 1139.0억 위안, 자동차 소비 증가율은 1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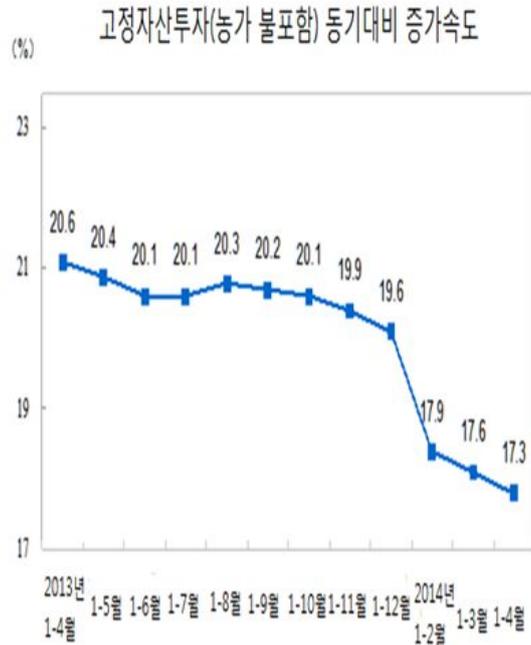
□ 공업 부가가치 및 공업 생산자출하가격 증가율 변화추이

- 2014년 4월 규모이상 공업부가가치는 동기대비 실제 8.7% 증가하여 3월보다 0.1%p 하락함.
  - 제품별로 볼 때, 에너지 소비가 큰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의 생산량 증가속도가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음.
  - 투자가 둔화되어 투자제품 산업 비중이 비교적 큰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음.
  - 소비와 관련된 자동차, 에틸렌의 생산량 증가속도가 상승함.
- 2014년 4월 전국 공업생산자 출하가격의 동기대비와 전월대비 증가율은 각각 -2.0%와 -0.2%였고, PPI는 연속 26개월 하락함으로써 수요 부진의 국면이 형성됨.

나. 투자: 경제둔화의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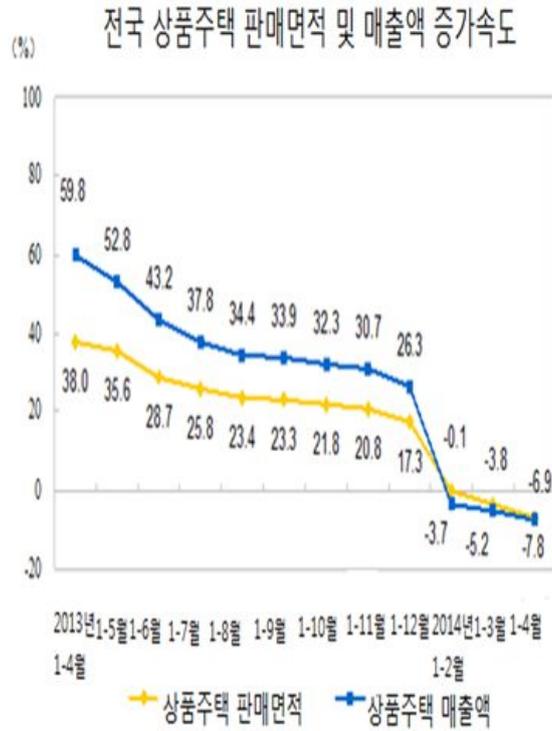
□ 고정자산 투자액 변화 추이

- 2014년 1-4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10조 7,079억 위안 달성함.
  - 동기대비 명목성장률은 17.3%를 기록하여, 증가율은 1-3월 대비 0.3%p 하락하였고 지난해 1-4월의 20.6% 대비 3.3%p 하락함.
  - 1-4월 전월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6%, 1.28%, 1.24%, 1.17%로 투자 증가속도가 점점 둔화됨.
  - 올해 들어서 중국정부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는바, 1-4월 인프라시설 투자(전력 불포함)는 1조 6,865억 위안 달성하여, 동기대비 성장률은 22.8%로 증가속도는 1-3월 대비 0.3%p 상승함.



□ 부동산투자 둔화

- 2014년 1-4월,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는 2조 2,32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실제 16.4% 증가하고 증가속도는 1-3월보다 0.4%p 하락함.
  - 그 중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68.5%를 차지한 주택투자는 16.6% 증가한 1조 5,299억 위안으로 증가속도가 0.2%p 하락함.
- 1-4월 부동산개발 업체의 토지구입 면적은 8,130만㎡로 동기대비 7.9% 하락하였는바, 하락폭은 1-3월 대비 5.6%p 확대됨.
  - 부동산 신규 착공면적은 4억 3,234만㎡로 22.1% 하락, 그 중 주택 신규 착공면적은 3억 1,184만㎡로 24.5% 하락함.
- 1-4월 상품주택 판매면적은 2억 7,709만㎡로 동기대비 6.9% 하락, 하락폭은 1-3월 대비 3.1%p 확대됨.
  - 그 중 주택 판매면적이 8.6% 하락함.
  - 상품주택 판매면적은 동기대비 하락하였지만, 2013년 동기에 버금가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달함.
- 1-4월 부동산개발 업체의 자금조달은 3조 7,2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1-3월 대비 2.1%p 하락함.
  - 그 중 예약금과 예수금은 7.8% 하락한 9,019억 위안이고 주택담보 대출액은 3.1% 하락한 4,238억 위안임.



#### 다.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 2014년 4월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축소됨.

- 신축 상품주택의 지난해 동월대비 가격변화를 보면, 70개 도시 중에서 1개 도시만 가격이 하락하였고 남은 69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모두 상승함.
  - 가격상승 도시의 최고 상승폭은 13.6%에 달하였지만 가격하락 도시의 하락폭은 4.4%에 불과함.
- 중고주택(二手房)의 지난해 동월대비 가격변화를 보면, 70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가 가격 하락하였고 1개 도시가 지난해 동월가격을 유지하였으며, 남은 67개 도시의 가격이 상승함.
  - 가격상승 도시의 최고 상승폭은 12%이고 가격하락 도시의 최고 하락폭은 8.34%임.

□ 1, 2선 도시의 부동산은 과잉상태가 아님.

- 부동산 시장이 분화되기 시작함.
  - 1선 도시 부동산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하였지만, 2선과 3선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상승폭이 크

지 않고 4선 도시는 하락하기도 하였음.

- 토지왕(地王)은 개별적인 현상임.
- 미래 잠재수요를 의미하는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비중을 보면, 1선 도시와 2선 도시는 각각 1.84와 1.21이지만, 3선 도시와 4선 도시는 각각 0.98과 0.8에 불과함.
- 인구유입형인 1선과 2선 도시는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보다 많지만 3선과 4선 도시는 인구의 대외이동 현상이 심각하여 상주인구가 호적인구보다 적음. 3선과 4선 도시는 경제, 교육, 의료, 사회보험 시스템 등 부문의 발전이 부족하여 인구의 대외이동 문제가 심각함.
- 현재 전반적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부동산 리스크가 비교적 작음.

#### □ 중국은 부동산조정에 따른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음.

- 경제둔화로 인한 실업률 상승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음. 10% 이상의 임금상승률은 중국의 노동자시장이 공급부족 시장임을 의미함.
- 부동산 대출은 증권화 되지 않아 금융 파생상품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야기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의 은행업은 독점지위에 있는바,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은행은 토지가격의 50%에 대해서만 대출을 제공하는 등 요구가 상당히 엄격함. 즉 토지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부동산시장 둔화가 은행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주택 구입 시 선불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서 부동산 리스크가 대출을 제공받는 구입자에게 전가됨.
- 중국은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기타 투자를 통해 부동산투자 둔화에 따른 소극적인 영향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예컨대 인프라시설, 보장성 주택, 고속철도와 비행기 등 선진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투자 둔화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음.

####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

-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이나 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불간섭 입장이고 시장을 통한 부동산 가격조정을 도모할 것임.
- 현재 부동산투자 둔화에 대한 평가는 과거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과열투자에서 기존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좋은 발전양상을 보임.
- 또한 과거 부동산에 과도 투자된 자금이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어서 구조조정에 유리한 조정이라고 판단됨.
- 부동산 규제정책 불필요: 중국의 부동산은 전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투

자 둔화폭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음.

-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 일본의 경우, 1974년에 도시화율이 이미 70%를 상회하였고 1991년에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도시로 이전한 농촌인구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도시주민의 주택개선 수요와 투기수요에만 기인한 것이었음.
  - o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3년도에 53.7%에 불과하였고 70%에 달하려면 15-20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이 대량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전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수요가 막대함.
  - o 따라서 현재 부동산시장 둔화는 가격 상승폭의 둔화일 뿐이지 가격하락은 개별적인 현상에 불과함.
- 부동산시장 둔화에 따른 경제둔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2008년이나 2009년에 취했던 정부의 대규모적인 채권발행 등 전면적인 경기부양책과는 달리 미세조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2. 2014년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 가. 개혁과 안정적인 성장의 결합

#### □ 행정체제 개혁 심화

- 정부의 자체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축소와 권리이양을 추진함.
  - o 2014년에 계속하여 200건 이상의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하거나 권리를 이양함.
  - o 투자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전심사를 취소/축소하며 기업의 투자 자유권을 충분히 실시하며, 투자창업 원활화를 추진함.
  - o 사전심사가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해 권리 리스트제도를 구축하며 사회에 공개함. 리스트 이외의 사항에 대해 모두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비행정심사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함.
  - o 우선, 2013년에 수정한 정부 심사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올해 재수정함. 시장경쟁이 충분하고 기업의 자기조정이 가능하며 경제와 법률을 통해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시키고 여전히 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앙부문과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확정함.
  - o 둘째, 심사행위를 개선/규범화하며, 전국적 네트워크의 프로젝트를 심사, 비준, 등록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속절차 간소화, 온라인 운영, 기한부 종결을 실현함.

- 셋째, 투자관리를 혁신/개혁하여 사전 심사와 중개서비스를 축소하고 통합하며, 기업투자 심사방법과 외국인투자 심사등록방법의 발표를 가속화함.

#### □ 비국유자본이 더 많은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추진

-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함.
  - 사회자본, 특히 민간투자가 독점성격을 가진 정부자금과 국유기업 투자를 위주로 하였던 분야에 진입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비국유자본이 중앙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방법을 제정함.
- 인프라시설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자본 주도를 추진함.
  - 철도, 항구 등 교통 인프라시설, 차세대 정보 인프라시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공사, 석유와 가스 파이프 네트워크와 저장시설, 현대화 석탄 화학공업과 석유 화학공업 산업기지 등과 관련해서 기획 요구에 부합되고 산업고도화에 유리한 80개의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최초로 사회에서 공개 입찰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자본이 합자, 독자, 특허경영 등 방식으로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유치함.
- 석유가스 탐사, 공공사업, 수리공사, 공항 등 분야에서 사회자본에 대해 개방함.
  - 비공유제기업이 특허경영 분야에 진입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철도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자본에 기회를 제공함.

#### □ 다양한 금융기구의 설립 추진

- 민간자본을 통한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자본이 금융기구와 중개서비스기구 주식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도록 유도함.
  - 온라인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 감독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다국적 자본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적이거나 지역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지선을 지킴.
  - 금융 활성화를 통해 소형 기업, “삼농” 등 실물경제를 더욱 잘 발전시킴.
- 국유경제 분포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며, 현대화 기업제도와 회사법인 관리구조를 구축함.
  - 국유자산 관리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히 확정하며 국유자본 투자운영 회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함.

## □ 철도 투자/용자 체제 개혁 심화

- 건설자금 조달 관련 정책조치를 취함.
  - 매년 2,000-3,000억 위안의 철도발전 기금을 설립함.
  - 철도건설 채권발행 종류와 방식을 혁신하고 올해 사회에 1,5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하며 철도 채권 투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함.
  - 철도건설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사회자본의 투자규모를 확대 시킴.
  - 철도의 공익성, 정책성 운송에 대해 중앙재정은 일정 기간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점차 규범화된 보조금 제도를 구축함.
-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고 이미 허가받은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착공을 추진하며 후속적인 프로젝트 선행 업무의 추진을 가속화함.

## 나.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성장의 결합

### □ 개혁에 의존, 진퇴(進退)병행, 산업구조 조정 강화

- 進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
  - 생산성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 종합 개혁시범과 시범건설을 추진하며, 문화창의와 디자인서비스 관련 산업의 융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보험, 비즈니스,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함.
  -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설비 감가상각의 가속화 등 정책을 완비하여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신흥산업 창업혁신 플랫폼을 설립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직접회로, 빅 데이터, 선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에서 선진적인 수준을 실현하여 향후 산업발전을 유도해야 함.
  -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거 제조기업에만 국한되었던 하이테크기업 인증을 생산성 서비스업 기업으로 확대시켜 하이테크기업 인증을 통해 생산성 서비스업 기업이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를 25%에서 15%로 인하 조정하는 등 조세우대 정책을 실시함.
- 退는 더 능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함.
  - 시장경쟁을 통한 우열을 가려 열등인자가 도태되도록 하고(優勝劣汰)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함.
  - 생산과잉이 극심한 산업에 대해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기술 등 표준을 강화하고 각종 우대정

책을 취소하며 저장량을 소비하고 신규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함.

- 올해 2,700만 톤의 철강, 4,200만 톤의 시멘트, 3,500만 표준 컨테이너의 판유리 등 낙후한 생산력을 도태시켜 “12.5”기간의 낙후 생산력 도태 임무를 1년 앞당겨 완성할 예정임.

## □ 에너지구조 조정

- 현재 일부 에너지 중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함.
  - 이는 안정적인 성장과 에너지 확보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구조 조정, 성장방식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임.
- 국제 최고안전 표준을 적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동부연해 지역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건설함.
- 생태보호와 이주민 배치 기초 하에서 합리적인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함.
- 풍력에너지, 태양광발전 기지와 관련 전력수출 프로젝트를 건설함.
- 원거리 대용량 전기수송 기술을 발전시키고 규획에 따라 올해 일부 특고압과 상규기술을 적용한 “서부에서 동부로”의 전기수송(西電東輸) 통로를 건설하고 자원배치를 최적화 하여 에너지소비와 효율향상을 촉진시킴.
-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고효율 청정석탄 설비의 인증을 가속화하며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표준에 달하지 못한 기존 설비를 개조하고 석탄의 집중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대기환경을 보호함.
- 에너지구조 조정의 핵심은 에너지체제 개혁임.
  - 경쟁을 개방하고 각종 다양한 투자주체가 에너지 분야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장려함.
  - 석탄관련 비용개혁(清費立稅)을 추진하고, 석탄자원세 개혁을 심화함.
  - 전력 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하고 수요-공급 양자의 직접 거래를 추진하며, 더욱 경제적인 양질의 전기를 제공하며, 전기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윈난성 전기사용자와 발전기업 간의 시범 직접거래 (전기직접구입)의 전기 가격을 유관기관이 비준하였고, 이는 전기 직접거래 개혁 추진에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윈난의 전기개조 시범은 윈난 전기시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방정부가 현지 알루미늄 전해 등 전기소비 프로젝트를 위해 전기가격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러한 시범개혁이 더 넓은 범위에서 비슷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다. 민생혜택과 안정적인 성장의 결합

### □ 판자촌 개조

- 2014년에 470만 채 이상, 2017년에 총 1,500만 채의 판자촌을 개조할 계획임.
- 2020년에는 총 3,760만 채의 판자촌을 개조하여 1억 명이 판자촌과 “도시 속의 농촌(城中村)”을 벗어나도록 할 예정임.

#### □ 민생혜택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정책

- 3중 전회에서 향후 인프라시설과 주택 관련 정책성 은행의 설립을 제시하였음.
  - 올해 시행될 대규모 판자촌 개조를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정책지원과 시장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결부시키며, 특히 국가신용에 의존하고, 국가전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금은 원금확보/적은 이윤의 개발성 금융을 활용하여 판자촌 개조를 위해 합법적이고 용이하며 적절한 비용의 안정적인 용자루트를 제공하여 판자촌 개조의 자금수요를 확보하고 자금비용을 절감시켜야 함.
  - 국가개발은행은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단독정산을 실시하고 시장방식으로 주택금융 전문채권을 발행해야 함. 동 채권은 우편저축 등 금융기구와 기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상업은행, 사회기금, 보험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중점적으로 판자촌 개조와 도시 인프라시설 등 관련 공사 건설에 활용되도록 지원해야 함.

#### □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 고용창출 촉진은 안정적인 성장의 중요한 목표이자 민생혜택의 기본적인 내용임.
  - 고등학교 졸업생, 실업자, 장애인 등 중점적인 단체의 창업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2013년 말 종료된 중점 단체 창업과 고용창출 지원과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선함.
  - 첫째, 우대정책 적용 산업과 인원 범위제한을 취소하고, 1년 이상의 등기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모두 조세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 둘째, 과세 공제액 상한을 인상 조정함. 개인이 경영하거나 기업이 고용창출을 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정액 감세하는 이외에도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과거보다 더 큰 조세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셋째, 감세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교육부가세를 감세범위에 포함시킴.
  - 넷째, 절차를 축소하고 조세우대 정책 관리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더 좋은 창업, 고용창출 환경을 마련함.

#### □ 민생보장과 개선의 강화

- 최저선을 지키고 중점을 부각하며 제도를 완벽히 하고 여론을 유도하여, 민생개선을 위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완성함.
- 고용창출을 부각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생산과잉 중에서 형성된 실업자의 재취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며 판자촌 개조를 추진함.
- 환경관리와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와 정책지원을 강화함.

## 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두 가지 방어선

### □ 맞춤형 조치

- 실업문제가 불거지고, 경제가 7% 성장율이라는 최저선까지 둔화되었을 경우, 맞춤형 조치를 실시해야 함.
- 금리와 기준율 인하조정은 모두 맞춤형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중국경제는 통화긴축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실질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금리 시장화 이후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따른 현상임.
- 디폴트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준금리 인하조치보다 더 효과적임.
- 위안화가 지나치게 절하되어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만 예금지급준비금을 낮출 필요가 있고,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긴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옛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 채무리스크 방지 강화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 통제와 방지를 경제업무의 중요 임무로 간주해야 함.
  - 원천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분류별로 예산관리에 포함시키며 정부의 채무 절차를 엄격히 단속함.
  - 책임제를 명확히 실시하고 성구시(省區市) 정부는 현지 정부채무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짐. 교육과 심사를 강화하여 잘못된 정치실적 사상을 바로잡음.
-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과 지출책임 조정을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득 구획을 명확히 하며 기존 재정구조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함.
  - 규범화된 지방정부 채무융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예산관리에 포함시켜 정부 종합채무 보고제도를 실시하여 채무리스크를 방지하고 완화함.

## 마.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 추진

### □ 도시화 추진의 핵심

- 발전규칙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도시화를 추진하며,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향후 일정 기간 “3개 1억 명”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임.
  - 즉 약 1억 명의 농업인구를 도시호적으로 이전시키고 약 1억 명이 거주하는 도시 판지촌과 도시 중의 농촌을 개조하며, 약 1억 명의 중서부지역의 도시화를 실현함.

### □ 농업인구의 도시인구로의 전환 추진

-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도시 규모별로 차별화된 호적정책을 실시함.
  -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일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유능한 농민공과 그 가족이 점차 도시거주민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함.
  - 도시호적을 획득하지 못한 농업이전 인구에 대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함.
- 더 많은 농민공의 자녀를 도시교육에 포함시키고 외지 진학을 실현하며 농민공 직업기능 제고 계획을 실시함.
- 상주인구에 대한 도시 기본공공 서비스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농업이전 인구와 도시거주민이 도시의 현대화 문명을 공동 건설하고 공동 향유하도록 함.

## 바. 대외개방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 □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

- 전통적인 수출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비교우위와 경쟁우위를 창조함.
- 국내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전환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등에 대한 수입을 확대함.
- FTA 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고, 투자협정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 안정적이고 투명, 공정한 투자환경을 통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저우추취(走出去)에 대한 거시적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며, 대외투자 심사과정을 축소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추진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함.
- 안정적이고 완벽한 수출정책을 실시하고, 통관 원활화 개혁을 가속화 함.

- 다국적 전자 상거래를 확대하고, 수입장려 정책 실시를 통해 국내 부족제품의 수입을 확대하며, 가공 서비스무역의 전환과 고도화를 유도함.
- 기업의 자체 브랜드와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의 외주를 발전시킴.
- 국제 분업에서의 중국 제조업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신, 철도, 전기발전소 등 대형 플랜트의 수출을 장려함.

### 3. 2014년 경제성장 예측

#### 가. 2014년 경제지표

##### □ 경제지표별 성장률 예측

- 2/4분기, 3/4분기, 4/4분기 GDP성장률은 각각 7.5%, 7.6%, 7.5%, 올 한해의 성장률은 7.5%로 예상된다.
- 올 한해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로 예상된다.
  - 2013년도의 19.6%보다 2.6%p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임.
  - 그중 인프라시설 투자와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각각 25%와 14%로 예상된다.
- 수출과 수입은 각각 6%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M2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3.5%로 예상된다.

#### 나. 하반기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주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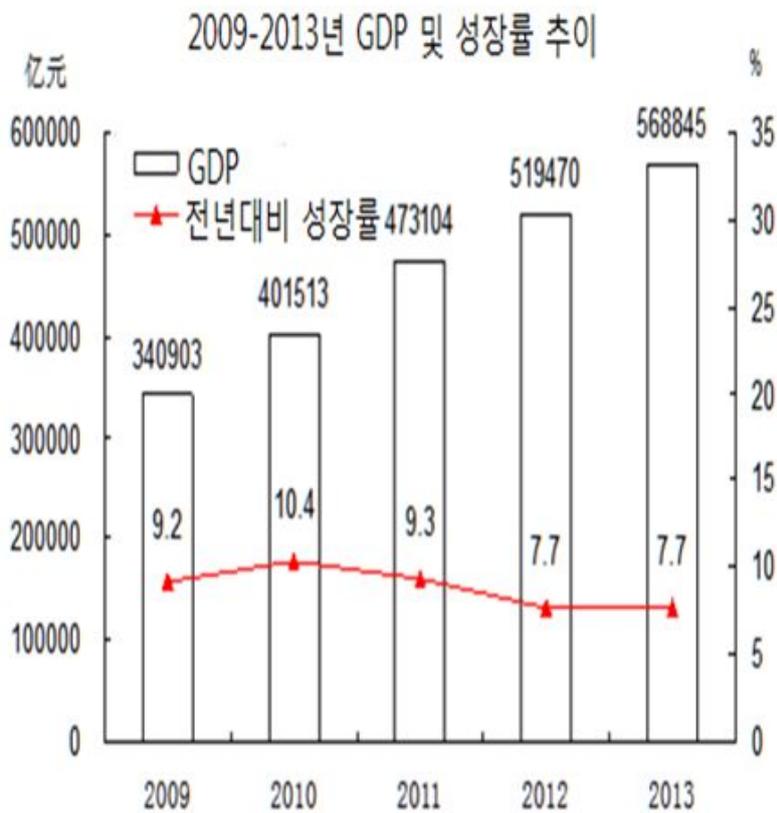
##### □ 중국이 처한 전략적 기회시기

-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에 있으며 공업화와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 여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이 마련되었음.
- 향후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방지하고 멀리 바라보며, 불리한 것은 피하고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주동적인 발전을 이뤄야 함.

□ 경제 잠재성장률에 의해 결정된 중고속 성장

- 1978-2008년, 중국의 경제 잠재성장률은 10% 내외 유지, 과거 8-12%는 중국경제의 합리적인 성장구간으로 인정되었음.
- 2011-2020년 경제 잠재성장률은 7-8%로 하락,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됨.



□ 잠재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주요요인

- 국민의 저축률이 50%를 초과하였고, 향후 10년 사이 여전히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높은 저축률에 의해 높은 투자율이 결정됨.
  - 1965년-1972년 사이 일본의 자본 축적률은 31.9%, 저축률은 30.8%에 달함.
  - 2013년 GDP 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의 기여도는 50%, 자본형성 총액의 기여도는 54.4%, 상

품/서비스 순수출 기여도는 4.4%로 투자는 여전히 경제성장의 가장 큰 기여요인임.

- 중국은 인구총량이 막대하고 지역발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동부연해는 제조업 기지인 “세계공장”에서 신흥 “세계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지만, 산업이전을 통해 서부지역은 여전히 “세계공장”역할을 하고 있음.
  - 동일한 주권국가의 통일된 시장에서 “세계공장”과 “세계 신흥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은 세계경제 발전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중국 특유의 우위이고 경제문화에 대해 완화역할을 할 수 있음.
- 중국 경제체제는 상품경제가 자연적으로 성장한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전환된 시장경제 체제로써, 현행 체제와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사이에는 여전히 비교적 큰 격차가 있음.
  - 이러한 격차는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막대한 개혁 보너스임.
  -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은 생산력을 다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임.

#### □ 현재 중국의 4가지 非과잉 투자

##### ① 서비스업

- 2013년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향상되어 최초로 2차 산업을 상회하였음.
- 2013년 고정자산 투자(농가 불포함)는 지난해 동기대비 명목 증가율 19.6%로, 43조 6,528억 위안에 달하였음.
- 그 중 국유기업 및 국유지분 기업의 투자와 민간투자는 각각 16.3% 증가한 14조 4,056억 위안과 23.1% 증가한 27조 4,794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특히 민간투자는 투자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2012년 대비 1.8%p 상승한 63%에 달함.
- 2차 산업과 3차 산업 투자는 각각 17.4% 증가한 18조 4,804억 위안과 21% 증가한 24조 2,482억 위안에 달함.
-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5개 산업: 교통운송, 창고저장과 우편업무 증가율이 36.9%, 수리와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증가율이 35.2%, 위생과 사회사업 증가율이 33.8%, 농림축어업의 증가율이 32.5%, 문화와 체육 및 오락업 증가율이 28.7%에 달함.
- 그 중 농림, 수리업을 제외한 기타 3가지는 모두 서비스업에 속함.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증가율은 각각 20.7%와 25.4%에 달함.

② 소비를 위한 인프라시설

③ 현대 제조업 투자는 非과잉 상태임.

- 2013년 광업 투자는 10.9% 증가하였고 제조업 투자는 18.5% 증가하였음.
-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한 자동화설비 업그레이드 투자와 환경설비 투자는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생산설비 투자가 현저하게 둔화됨.

④ 1, 2선 도시의 부동산

### <질의·응답>

#### 질문 1.

중국의 GDP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노동시장은 공급부족 상황이고,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1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제이론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임. 즉 거시경제 지표와 미시경제 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중국정부는 성장보다는 고용창출, 성장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1/4분기 7.4%란 성장률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급히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답변 1.

2005년 이후 노동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국제기준으로 16-65세 사이의 노동자 증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2012년에 중국의 노동자 총수는 345만 명 감소하였고 2013년에 244만 명 감소하였음. GDP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노동자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노동자 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음. 2005년에 중국 노동자시장의 전환점이 나타났음. 1985년-2005년 사이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7.7%였지만, 2005년-2012년 사이 14.4%로 급등하여 임금상승률이 과거의 2배에 육박하였음.

아울러 중국의 정년 퇴직연령은 여자가 55세, 남자가 60세임.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7%와 13%에 달하였고 2014년 1/4분기에 10%에 달하였음.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불리한바, 현재 중국의 정년 퇴직연령 연장을 통해 임금상승률에 따른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즉, 정년 퇴직연령 조정을 통해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제압박을 해소하고자 함.

그 외 신규 고용창출도 예상보다 더 좋은 양상을 보였음. 과거 경험상 GDP 성장률이 7.5%일 경우 신규 고용창출은 900만 명이지만, 201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7.7%, 신규 고용창출은 1,300만 명에 달하였음. 그 원인은 주로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임. 과거 고용창출은 주로 제조업에 기인하였지만, 현재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가 더 큼. 2013년의 경우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1%였지만, 신규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9%에 달하였음. 즉, 똑같은 GDP를 창출할 경우,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더 많은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함. 기존 대다수 제조업은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자동화설비를 통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실업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서비스업을 통해 잘 해소하였기 때문임. 그중에서도 특히 양로 관련 서비스업이 앞으로 신규 고용창출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이었지만, 2023년이 되면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10년 사이 양로 관련 서비스업은 대량의 고용창출을 실현할 것이며, 경제둔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됨.

기존 중국정부에서 미세조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올 2/4분기, 3/4분기에 지속될 부동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경제둔화에 대한 사전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음. 정책조치는 일정 기간을 거쳐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임.

## 질문 2.

2013년에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3차 산업이 실제로 빠르게 증가한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나? 아니면 중국의 통계방식이나 세부정책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는가? 예컨대 2005년의 경우,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4%에 달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답변 2.

사실상 중국의 GDP 연도 통계에 누락된 서비스업이 많음. 중국은 GDP에 대해 연도별로 통계하는 이외 5년에 한 번씩 전면 경제조사를 진행하는데 동 조사를 통해 연도 통계에 누락된 서비스업 부분을 일부 찾아내어 보완함. 2005년에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원인은 바로 첫 번째 전면 경제조사를 통해 과거 GDP 통계에 누락되었던 서비스업을 찾아내어 보완했기 때문임. 이러한 전면 경제조사를 통해 향후 연도 통계에 누락된 서비스업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임.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연도 통계에 소비도 많이 과소평가 된 걸로 판단됨. 기존 전면 경제조사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업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소비 관련 통계는 아직 수정이 불가능함. 기존 GDP에 거품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과소평가될 수도 있음.

지금까지 3차례 전면 경제조사를 추진하였는데 첫 번째 전면 경제조사를 통해 얻은 통계와 연도 GDP 통계 사이에 17%란 큰 격차를 보였으며, 누락된 서비스업도 가장 많았음. 그 후 진행된 두 번째 전면 경제조사와 연도 통계 사이의 격차는 6%로 축소되었고 2013년에 세 번째 전면 경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금번 조사와 연도 통계 사이의 격차는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질문 3.

과거 국유기업이 독점하였던 철도, 태양광 등 SOC투자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민간기업에 외국기업도 포함되는가?

### 답변 3.

여기서 말하는 민간기업은 주로 국내 비국유기업을 말하는 것임.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 적용 여부는 동 외국기업 소속국가와 중국이 FTA체결을 통해 무역원활화와 투자자유화 등을 실현하였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됨. 내국민대우는 양국 간의 상호주의를 적용함으로써 FTA체결 등을 통해 중국기업이 상대방 국가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을 경우, 상대방 국가의 기업 역시 중국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음. 즉 향후 중국은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FTA체결 여부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와 내국민대우 적용 등 우대정책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임.

### 질문 4.

중국정부에서 7.2%의 경제성장률도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하셨는데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하신 것은 중국정부의 목표달성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을 각각 6%와 7%로 예측하였는데 이미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4월 중국의 수출입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음. 따라서 5월 이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야만 예측하신 증가율을 실현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가?

### 답변 4.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인 일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에 의해 결정됨.

2011년-2020년 사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7-8%임. “12.5” 계획 기간의 목표성장률을 7%로 확정한 것은 사실 충분한 여지를 남겨둔 것임. 2011-2015년 사이에 7.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으며, 2016-2020년 사이에는 7.5%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됨. 2011년의 7.8%, 2012년-2014년의 7.5%, 나아가서 2015년의 경제성장률도 7.5%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준은 잠재성장률에 의해 결정된 것임. 잠재성장률이 높은 원인은 ① 높은 저축률, ②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 기인한 것임. 높은 저축률로 인해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는데 보편적으로 투자주도형 국가는 소비주도형 국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임. 아울러 국제적으로 서비스업 비중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더 큰 국가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임. 중국의 동부지역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많이 이전되었지만,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해외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되었음. 즉, 면적이 광활한 중국은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바, 제조업이 동부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되어 향후 10년 내에 여전히 제조업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제조업 증가율이 7%-8%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경제둔화 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

1-4월 중국 해관통계의 수출입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음. 사실상 중국의 수출입 무역현황은 해관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4월의 수출입 증가율은 3월보다 좋은 양상을 보였음. 아울러 작년 5월부터 허위 무역을 전면적으로 정리 단속하기 시작하였는바, 5월부터 실제상황에 근접한 진실한 수출입 증가율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 수출납품액(出口交貨值) 기준으로 수출입 증가율을 예측할 경우, 5월부터 6-7%의 증가율만 유지할 경우 2014년도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6%와 7%인 예측치를 실현할 수 있음.